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77

제출년월일 : 2012. 4.

제 출 자 : 최근배, 서성식, 송석호,
이호영, 천명숙, 홍진옥 의원

1. 개정취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01.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지역 농·축·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바람직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농·축산 농가의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을 월 2회(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지정 실시함.

단,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함(안 제15조의2 제1항)

나. 시장은 지역 농·축·특산품의 판매 확대 방안 강구(안 제15조의2 제2항)

3. 입법예고결과

- 시민 의견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의견 제시 ⇨ 법령위반
- 충주시 의견 : 없음

붙임 :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서 지역 농·축·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 제안, 협의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5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충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p>②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에서 지역 농·축·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 제언, 협의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한다.</p>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2.1.17] [법률 제11175호, 2012.1.17. 일부개정] **최종공포내용**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 02-2110-5142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24>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12.23, 2010.11.24>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2008.2.29, 2010.11.24>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호의 업무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5.12.23, 2010.11.24>

[제목개정 2010.11.24]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823

[별표 4] <개정 2011.4.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제2호라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824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다.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라.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경과일수 10일 이내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제1항제4호	10 20 30 50 80 100 200 300		
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6호	100	200	300

P25